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6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1.13~2025.11.19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오영훈, 도로, 권한이양(포괄적), 재정, 청년
경제·관광	주택, 생산, 수출, 감률, 전환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공동, 신부, 쿠팡, 수협생

※ 분석 기간 : 25.11.13.~25.11.19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RT 정책 혼선 인정 및 사과</li><li>- 현장 중심 민생 소통 행보</li><li>- 여객선 좌초 사고 긴급 대응</li></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광로 BRT 및 섬식정류장 논란</li><li>-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li><li>- 건축 조례 개정 및 도로 규제 완화</li></ul>
	권한이양 (포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네거티브 방식 전환 추진</li><li>- 국회 토론회 및 입법 공론화</li><li>-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조례 위임</li></ul>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역대 최대 지방재 발행 및 우려</li><li>-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li><li>- 교육청 재정 운용 미숙 질타</li></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엇박자</li><li>-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한계</li><li>- 청년 농업인 농지 및 정착 지원</li></ul>

##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고 수준의 다주택자 비중과 자산 양극화 심화</li> <li>- 세대 간 주택 소유 격차 확대 및 인구 구조 변화</li> <li>- 높은 무주택 가구 비율과 외지인 소유 영향</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 지수의 지속적 하락세</li> <li>- 서비스업 생산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심화</li> <li>- 건설 경기 수주액 급감과 투자 위축 장기화</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위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의 폭발적 성장</li> <li>- 주요 수출국 및 품목 다변화 성과</li> <li>-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노력</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품 감귤 유통 강력 단속 및 품질 관리</li> <li>- 대도시 소비 촉진 행사 및 마케팅 강화</li> <li>- 감귤 가공 산업 육성 및 우수 사례 선정</li> </ul>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경제 발전 심포지엄</li> <li>-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li> <li>-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도전</li> </ul>

##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안가 마약 발견 급증</li> <li>- 유관기관 합동 수색 및 대책</li> <li>- 타지역 및 해외 유사 사례</li> </ul>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공동성명</li> <li>- 사이버 위기 대응 합동 훈련</li> <li>-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li> </ul>
	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해결 촉구 성명 참여</li> <li>- 4.3 문제 해결 및 평화 포럼 활동</li> <li>-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요구</li> </ul>
	쿠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벽배송 기사 사망 사고 및 과로사 의혹</li> <li>- 노동계의 특별근로감독 요구</li> <li>- 소상공인 및 경제 단체의 입장</li> </ul>
	수험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및 자치경찰의 수송 지원</li> <li>- 시험장 내 사건 사고</li> <li>- 수능 이후 안전 관리</li> </ul>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1월 13일~11월 19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85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9건, 경제·관광 166건, 지역·사회 310건임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오영훈, 도로, 권한 이양(포괄적), 재정,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RT 정책 혼선 인정 및 사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영훈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서광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 정류장 도입 과정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혼잡 문제와 자가용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함. 양문형 버스 확보 지연 등으로 동광로 구간 공사를 보류했으며, 우회전 차로 확보 등 설계 변경을 통해 불편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li><li>·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BRT 개통 후 버스 운행 속도가 42% 향상되고 인도 폭 축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도민</li></ul></li></ul>
-------	-----	--

정치·행정	<p>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및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다만, 의회에서는 성과 중심이 아닌 도민 공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정책 실패 여부는 향후 대응에 달렸다고 지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장 중심 민생 소통 행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는 도청을 벗어나 도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본격화하고, 서부 권역인 한림읍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소통에 나선다. 제주시 아라동 등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 도서관 부족 등 실질적인 민원 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함</li> <li>·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염두에 둔 민생 행보라는 정치권의 해석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자연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수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각 읍면동별 방문과 정책 제안 접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음</li> </ul> </li> <li>- <b>여객선 좌초 사고 긴급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오영훈 지사는 야간에 제주항 운항관리센터를 긴급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승객 안전 조치를 지휘함. 해경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민 탑승 여부 파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함</li> <li>·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현장 상황실을 찾아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도민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 리더십을 보여주려 노력함. 승객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박 안전 관리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점검을 주문하는 등 위기 관리 능력을 부각시킴</li> </ul> </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광로 BRT 및 섬식정류장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광로에 도입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체계가 도로 혼잡을 가중시키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됨. 버스 기사들의 진입 위험 호소와 일반 차량의 정체 심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구조적 문제 등이 드러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li> <li>· 제주도는 이에 대해 버스 속도 향상과 인도 폭 유지 등의 성과를 제시하면서도, 동광로 구간 착공을 잠정 보류하고 설계 변경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도민 공감대 부족과 성급한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교통 정책 수립 시 성과보다는 도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짐</li> </ul> </li> <li>- <b>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숫자가 포함된 '5·16도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오영훈 지사 역시 개인적으로 명칭 변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서울의 경우 5·16광장이 여의도공원으</li> </ul> </li> </ul>

	<p>로 바뀐 사례가 있으나, 제주는 50년 넘게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는 도로명 주소법상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 주소 사용자(약 2,000명)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과거 서귀포시의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많았던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함. 향후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도민 의견을 다시 물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변경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함</li> </ul> <p>- 건축 조례 개정 및 도로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신규 개설 도로도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함. 이는 기존 도로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축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치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심의 기준 마련도 병행할 계획임</li> <li>· 또한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과 부지 내 건물 간 이격 거리(인동 간격)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임</li> </ul>
정치·행정	<p>- 네거티브 방식 전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기존의 개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입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등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함. 이를 통해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도모함</li> <li>·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맞춰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등 5개 분야 법률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포괄적 이양을 시도하고 있음. 이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통째로 이양받아 조례로 위임하는 획기적인 모델로, 실질적인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 분권의 선도적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함</li> </ul> <p>- 국회 토론회 및 입법 공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논의함. 토론회에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률과 조례 간의 입법권 배분을 재설계하여 제주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됨</li> <li>· 오영훈 지사는 토론회에서 개별 이양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음을 강조하며,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이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라고 역설함.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 및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li> </ul>

	<p><b>-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조례 위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핵심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법률 단위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음. 이는 획일적인 국가 법체계에서 벗어나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조례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 분권 실현의 필수 요건으로 꼽힘</li> <li>· 다만, 개별 법률에 근거한 국가 사무를 조례로 포괄 위임하는 것이 상위법 충돌이나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과제로 남아있음.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부 설득을 통해 법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이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선도적 시도임을 강조하고 있음</li> </ul>
정치·행정	<p><b>-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및 우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 부양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4,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함.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확장 재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li> <li>·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채 발행이 건설 경기 부양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2027년 이후 착공 사업에도 발행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함. 지방채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책 부재와 관리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재정 위기 가능성성이 지적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상환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고됨</li> </ul> <p><b>-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도의회는 '국비확보단'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 내년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펼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429억 원 규모의 증액을 건의하며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원장을 설득함</li> <li>·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제주의 특수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오영훈 지사는 각 부처와의 협력 성과를 강조하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필요한 국비가 삭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li> </ul> <p><b>- 교육청 재정 운용 미숙 질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면서 학교 시설 공사 등 주요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세수 감소를 예측하고도 선제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됨. 재정 진단 용역 결과를 통해 세입 감소가 예견되었음에도 안이한 세입 전망으로 예산을 운용하다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지적임</li> <li>·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인해 기금 적립액을 활용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의결된 계속비 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음. 도의회는 교육청의 재정 운용 능력 부족을 강하게 성토하며, 향후 체계적인 예산 계획 수립과 교육 재정 특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엇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입주 자격 획득에 필수적인 교육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정책 엇박자가 발생함. 스마트팜 임대 1순위 자격 요건인 20개월 교육 과정을 이수할 시설이 도내에 없어, 청년들이 육지부로 나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됨</li> <li>· 도의회는 스마트팜 완공 시점과 교육 센터 개소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정작 제주 청년들이 입주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의 난맥상을 비판함. 제주도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교육 과정을 인정받거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청년 농업인들의 혼란과 피해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li> </ul> </li> <li>-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신청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함. 정부 지침에 따른 한시적 지원과 복잡한 절차,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의 중복 지원 배제 등이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li> <li>· 도의회는 파격적인 임대료 지원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원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함. 인천시의 '월 1만원 행복주택'과 같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li> </ul> </li> <li>- 청년 농업인 농지 및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려 해도 높은 땅값과 임대 농지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도유지 등 공공 용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도의회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나 자투리 도유지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도정에 요청함</li> <li>· 또한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유학 등과 연계하여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통합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 오영훈 지사는 행정 재산을 제외한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임</li> </ul> </li> </ul>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주택, 생산, 수출, 감률, 전환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고 수준의 다주택자 비중과 자산 양극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의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은 20.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3건 이상 소유자 비중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특정 계층에 주택이 집중된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li> <li>· 주택 소유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의 주택 가격은 상승한 반면 하위 10%는 하락하여,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자산 격차가 45배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li> </ul> </li> <li>- 세대 간 주택 소유 격차 확대 및 인구 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주택 보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30대와 40대 소유자는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세가 확연해 세대 간 주택 보유 격차가 커지고 있음</li> <li>· 특히 한때 2만 명을 넘었던 30대 주택 소유자가 1만 8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높은 집값 및 고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li> </ul> </li> <li>- 높은 무주택 가구 비율과 외지인 소유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무주택</li> </ul> </li> </ul>
-------	----	--

		<p>가구 비율은 43.4%로 서울,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여전히 도민의 주거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비중이 12.0%를 차지하고 서귀포시의 경우 그 비중이 17.5%에 달해, 외지인과 다주택자의 높은 보유 비중이 무주택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li> </ul>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 지수의 지속적 하락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분기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으며, 의약품과 식료품 생산은 늘었으나 음료와 비금속광물 등의 생산이 줄어들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li> <li>전국 평균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 등의 호조로 5.8%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제주는 서울,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이며 지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상태임</li> </ul> </li> <li><b>- 서비스업 생산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2%나 급감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특히 부동산(-40.9%)과 정보통신(-34.4%) 분야의 생산 하락이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함</li> <li>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3.1% 증가한 흐름과 달리 제주는 3개 분기 연속 역주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10개 분기 연속 감소해 내수 소비와 서비스 생산이 동반 부진에 빠짐</li> </ul> </li> <li><b>- 건설 경기 수주액 급감과 투자 위축 장기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분기 건설수주액은 12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7%나 급감했으며, 민간(-71.3%)과 공공(-60.6%) 부문 모두에서 발주가 크게 줄어들어 건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li> <li>건설수주 감소세는 2023년 1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건설수주액이 26.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제주는 토목과 건축 공사 모두 위축되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줌</li> </ul> </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전국 1위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의 폭발적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월 제주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8.1% 증가한 2836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li> <li>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7.5% 급증한 190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67.2%를 차지해, 반도체 분야가 제주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입증함</li> </ul> </li> <li><b>- 주요 수출국 및 품목 다양화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호조로 대만으로의 수출이 20배 이상 폭증하고 홍콩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권 주요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됨</li> </ul> </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외에도 넙치 등 수산물 수출이 26.1% 증가하고 의약품 수출이 157.6% 늘어났으며, 영국과 러시아 등 신규 시장으로 화장품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이 이어짐</li> <li><b>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산일출봉농협은 올해산 제주 겨울무의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캐나다,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넓혀 올해 1500톤 수출을 목표로 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음</li> <li>다만 10월 농산물 전체 수출은 음료와 과실류 부진으로 감소했으나, 사탕과자류 수출이 급증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지에서 판촉 행사를 여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지속하고 있음</li> </ul> </li> </ul>
경제·관광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비상품 감귤 유통 강력 단속 및 품질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도매시장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 기준(크기 등)을 위반한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 10건(3100kg)을 적발하고 강력한 품질 관리 의지를 표명함</li> <li>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에 맞춰 규격 미달 소과나 대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감귤 가격 안정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과장과 유통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음</li> </ul> </li> <li><b>대도시 소비 촉진 행사 및 마케팅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와 감귤연합회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식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대형 마트 및 온라인몰과 연계한 할인 판매를 통해 본격적인 노지감귤 소비 봄 조성에 나선</li> <li>제주시장은 수도권 소재 농협 5곳을 직접 방문해 감귤 직거래 방안을 협의하고 판촉 행사를 참관하는 등 행정 차원에서도 산지와 소비자 간 협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행보를 보임</li> </ul> </li> <li><b>감귤 가공 산업 육성 및 우수 사례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경진대회에서 감귤 과즙을 생산하는 하효살룡협동조합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감귤을 활용한 가공 제품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인정받음</li> <li>감귤 농업인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 기술과 가공 제품 개발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을 수상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짐</li> </ul> </li> </ul>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경제 발전 심포지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와 한국은행은 기후 위기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함</li> <li>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특구 경험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경제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li> </ul> </li> <li><b>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테크노파크는 그린수소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제주형 그린수소</li> </ul> </li> </ul>

경제·관광	전환	<p>산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수전해 시스템 기술 전망과 경제성 분석 등을 논의하며, 그린수소를 제주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함</li> <li>- <b>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도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와 디지털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li> <li>·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결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전력 수급 자원을 활용한 출력 제한 완화 방안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 전략이 논의됨</li> </ul> </li> </ul>
-------	----	--

- 지역 · 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발견(해안/마약), 공동, 신부, 쿠팡, 수협생** 등으로 나타남



###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주 해안가 마약 발견 급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산 차 포장지 위장 마약류 잇단 발견 및 수거제주 해안가에서 중국어(우롱차 등)가 적힌 포장지에 담긴 마약류 의심 물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지난 9월 29일 첫 신고 이후 현재까지 총 15건에 달하</li></ul></li></ul>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p>며, 수거된 양은 약 34kg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내용물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약 10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귀포 및 제주시 전역 해안으로 발견 지역 확대초기 서귀포시 성산읍 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던 것이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등 제주 북부 및 동부 해안 전역으로 발견 지점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해경은 주민 신고와 순찰을 통해 1kg 단위로 포장된 마약 뭉치를 잇달아 수거하고 있으며, 포장지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 등을 통해 해상 유입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음</li> </ul> <p>- <b>유관기관 협동 수색 및 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군 협동 수색 체계 가동 및 감시 강화마약류 발견이 잇따르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도청 등 7개 유관 기관이 협동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인력 400여 명과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해 해안가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의심 물체 발견 시 절대로 개봉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함</li> <li>국과수 성분 의뢰 및 국제 공조 수사 착수수사 당국은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제조 출처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함. 또한,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과 선박 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인터폴 및 국제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유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li> </ul> <p>- <b>타지역 및 해외 유사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및 일본 대마도 등 유사 발견 사례 확인제주뿐만 아니라 경북 포항 해안과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도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차 포장지 마약류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특정 해역에서 대량의 마약류가 유실되었거나 투기된 후 쿠로시오 해류 등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광역적인 해상 마약 유류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임</li> <li>수사 난항 및 장기화 우려발견된 마약 포장지에서 지문이나 DNA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검출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약류가 담긴 포장지가 해수에 장기간 노출되어 증거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유통 경로나 발원지를 특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민 사회의 불안감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li> </ul>
		<p>- <b>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공동성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계 인사 186명 제2공항 갈등 해결 촉구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10년을 맞아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원로 등 186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약대로 도민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강력히</li> </ul>

지역·사회	공동	<p>요구할 것을 주문하며 연대 의지를 표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적 절차와 도민 주권 실현 강조공동 성명 참여자들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이는 단순한 찬반 논리를 넘어 제주의 공동체 회복과 자존을 지키기 위한 민주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li> </ul> <p>- 사이버 위기 대응 협동 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지역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비롯해 제주도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도내 주요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동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이 실시됨. 최근 지능화되는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초동 대처 및 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둠</li> <li>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대응력 제고이번 훈련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역 내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동 대응팀 소집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 자생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됨</li> </ul> <p>-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협력을 통한 오름 보전 관리 체계 재정비제주특별자치도는 67개 단체가 참여하는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름 보전 활동을 강화함. 이는 관 주도의 관리를 넘어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경 정화, 식생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모델임. 참여 단체들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체계적인 오름 관리와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li> <li>시민 참여형 환경 보전 문화 확산이번 활동은 오름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보전해야 할 환경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제주도는 참여 단체 간의 경험 공유와 소통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 참여형 환경 보전 문화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임</li> </ul>
		<p>- 제2공항 해결 촉구 성명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 공동 성명 동참제주 제2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각계 인사 186명 공동 성명에 문창우 주교, 강우일 전 주교를 비롯해 임문철, 김태정, 이건용 신부 등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들이 대거 이름을 올림. 이들은 종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제주의 환경 보전과 공동체 평화를 위해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멈추고 도민의 뜻을 물을 것을 강력히 호소함</li> <li>평화와 생명 가치 수호를 위한 연대사제들의 참여는 제2공항 문제가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생명과 평화의 문제임을 시사함. 강정 해군기지</li> </ul>

지역·사회	신부	<p>반대 운동 등의 경험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이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반대하고, 약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종교계의 역할을 수행함. 이는 시민사회 및 타 종교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 사회에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됨</p> <p>- <b>4.3 문제 해결 및 평화 포럼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노력제주 4.3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종교계, 특히 신부들의 역할이 재조명됨. 4.3 평화포럼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4.3의 진실을 알리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앞장서 온 사제들의 헌신이 언급됨. 이들은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li> <li>·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뉴스 맥락 상 일부 신부들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의 통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제주 도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li> </ul> <p>- <b>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공동 성명에 참여한 신부들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함. 이는 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li> <li>· 권력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사제들은 권력의 독주나 부당한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소금 역할을 자임함. 정치권과 행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함. 이러한 활동은 제주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함</li> </ul>
		<p>- <b>새벽배송 기사 사망 사고 및 과로사 의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야 배송 중 사망 사고와 노동 환경 논란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택배 기사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민주노총과 유가족은 고인이 부친상 직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강도 심야 노동에 투입되었다며 명백한 '과로사'를 주장함. 반면 사측(대리점)은 고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반박하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됨</li> <li>· 음주운전 의혹 제기 및 경찰의 번복해당 대리점 측이 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경찰이 초기 브리핑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현장 상황이 위급해 측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키움.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계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노총 및 유가족의 책임 규명 촉구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시스템(클렌징 제도 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함.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쿠팡 및 해당 대리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이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로 확대됨</li> <li>· 사회적 합의 위반 및 시스템 문제 제기노조 측은 쿠팡CLS가 발표한 '격주 주5일제' 등의 과로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고인의 경우 주 6일 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데이터로 제시함.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li> </ul> </li> <li>- 소상공인 및 경제 단체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벽배송 서비스 유지 지지 성명제주 지역 소상공인 및 경제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중단 요구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이들은 새벽배송이 도서 지역인 제주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강조함. 노동자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li> <li>·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상생 방안 모색경제 단체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배송 금지가 아닌 물류 인프라 지원과 시스템 개선을 제시함.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류 지원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며, 안전한 배송 환경 조성과 서비스 유지가 양립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노동권과 소비자 편익, 지역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및 자치경찰의 수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실 임박 수험생 긴급 수송 작전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입실 시간이 임박하거나 버스를 놓친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이 긴급 수송 작전을 펼침. 순찰차와 싸이카를 투입해 수험생을 시험장 까지 안전하게 이송했으며, 신분증이나 도시락을 두고 온 수험생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li> <li>·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 관리 실시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시험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선다. 주요 교차로와 시험장 입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수험생 탑승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 또한 소음 유발 차량을 통제하여 듣기 평가 시간 등에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함</li> </ul> </li> <li>- 시험장 내 사건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장 가방 내 흉기 소지 수험생 적발서귀포시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li> </ul> </li> </ul>

		<p>쉬는 시간 중 감독관이 수험생 가방에서 흉기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수험생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 이 사건으로 인해 시험장 내 안전 관리와 검색 절차에 대한 경각심이 일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시율 감소 및 시험장 분위기 올해 제주 지역 수능 결시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의대 증원 등 입시 변수와 재학생 중심의 수시 최저 등급 충족 필요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예년과 달리 큰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 속에 시험이 치러졌으며,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시험장 앞을 채움</li> </ul> <p>- <b>수능 이후 안전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선도 및 일탈 방지 캠페인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유관기관이 합동 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함. 제주시청 대학로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 환경을 점검하고, 음주 및 흡연 등 비행 행위를 단속함. 수험생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 활동을 강화함</li> <li>다양한 수험생 혜택 및 행사 마련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 행사가 마련됨. 항공사, 영화관, 관광지 등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됨. 이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첫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